시민 사회 운동과 과학 기술: 과학기술의 민주화 논의의 전개

박진희(가톨릭대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들어가는 글

현대 사회의 문제는 과학기술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한해 우리 언론을 장식하였던 굵직한 사회 문제들-NEIS, 새만금 간척, 부안사태- 역시 직간접적으로 과학기술과 연관을 맺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운동 진영에서 과학기술 문제가 중심적인 이슈가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실제, 과학기술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민과학센터', 정보 통신 기술에 초점을 맞춘 '정보 통신 연대' 등이 결성되어 이들 과학기술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독자적인 단체 외에도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의 예에서 보듯이 사안에 따라 '공대위'가 구성이 되어 연대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었다. 대학이라는 한정된 공간이기는 하였지만, 이미 70년대에 '민중과학'에 관한 논의들이 있었다. 그후 학생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80년대에는 '과학기술자'들의 사회 운동 논의들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학생운동 차원이 아닌 본격적인 사회 운동 차원에서 과학기술 문제가 제기되게 된 것은 87년에 '청년과학기술자협의회'가 결성되면서부터이다. 이들은 과학기술노동자론을 주장하며, 과학기술자 노동운동을 통해 과학기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았다. 청과협의 협소한 노동운동론에 반대하여 청과협 구성원들 중 일부가 90년에 독자적으로 '한국과학기술청년회'를 결성하였다. 청과협이 노동운동과 과학기술 문제를 결합하고자 하였다면, 한과청에서는 당시 민족, 통일운동을 지향하던 '청년 운동'과 과학기술 문제를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두 단체 모두 사회 변혁 운동의 당위론에 기대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과학기술' 문제에 천착하지는 못하였다. 게다가 생산력으로서 '과학기술'이라는 정의에 매달려 '과학기술 노동운동'과 '과학기술 자립화'에만 주력하고 있었다. 당연히 과학기술로부터 비롯되는 사회 문제들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었다. 과학기술의 오남용 문제나 대안적인 과

학기술 문제는 실질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이들 문제는 80년대 말에 결성되는 '전문가 단체'에 의해 실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 의사회', '건상사회 실현 약사 협의회', '노동과 건강 연구회' 등은 전문 지식의 올바른 사용을 지향하고 있었다.

현대 과학기술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9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에 의한 시민권의 제약이나 침해에 대한 대중적인 저항이 조직화되기 시작하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요구들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민주화'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90년대 이후의 변화들을 살펴보며, 과학기술 민주화 논의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를 점검해본다.

1. 시민 사회의 성장과 과학 기술 문제

90년대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시민사회'이다. 사회학계에서 시민사회의 성격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들이 진행되고 있지만[23], 80년대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국가적 통제로부터 자율화한 시민 사회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들 시민 사회의 분화와 더불어 사회의 문제 영역도 분화되고 있다. 조희연에 따르면, 이들 문제 영역은 크게 계급적 문제 영역, 전계급적 문제 영역, 소비, 생활상의 문제영역, 중앙 수준의 문제 영역, 지방 수준의 문제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24] 주택이나 환경, 소비자 권리 등의 문제들이 사회 운동의 중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시민 사회 분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80년대 사회 변혁 운동의 중심 주제였던 계급 문제나 노동 문제 대신에 일상 생활과 연관된 문제들, 시민권의 문제들이 시민 운동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 하에서 90년대 들어 시민 운동과 과학기술은 새로운 연관을 맺게 된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의 단체들이 과학기술정책을 매개로 정부의 협상 파트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산하 '한글 전산화 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한글코드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책위'는 91년 4월에 '한글코드개정 추진협의회'로 개편하면서 완성형코드 문제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작업에 들어간

23) 이 논쟁에 대한 개괄은 박형준, 「민주화, 권력의 재구조화, 그리고 성찰적 시민사회」 『경제와 사회』 97년 여름호 (통권 제 34호) 참조.
24) 조희연, 「민중운동과 시민 사회, 시민 운동」, 『실천문학』 1993년 겨울호, 255쪽.

다. 언론 작업 및 서명 작업으로 운동이 확산되어가자 정부에서는 조합형 코드를 완성형과 함께 공동 표준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93년에 한과청에서 벌인 '특허 심판 제도에 대한 위헌 제청' 사업은 94년에 '기술판사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로 확장되어, 특허법원 설치라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하였다. 이 두 사업의 경우는 한과청이라는 시민 단체가 매개가 되어, 일선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쐐기를 박을 수 있었던 예들이다. 공동 대책위와 운동본부는 모두 관련 종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꾸려졌고, 이들 조직을 통해 일선 과학자들의 목소리들이 수렴될 수 있었던 것이다. 기술과 연관된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시민 단체에 의해 일정 제어를 받게 된 것은 90년대의 새로운 현상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과청은 일선 과학기술자들을 대변하는 시민 단체로서 자신의 위상을 새로이 정립할 수 있었고, 95년 이후로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검토 토론하는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렇게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감시, 비판을 과학기술 분야의 시민운동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한 이들이 경실련의 과학기술위원회이다. 93년 5월 경실련 산하에 만들어진 과학기술위원회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감시하고 정부에 건의하며 과학기술계의 안일한 연구 문화를 쇄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다. 일선 현장의 과학기술자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국민 복리를 희생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감시 활동과 자체 연구를 통한 정책 대안 제시를 내세웠다. 1994년 이후로 「과학기술 정책 체계의 문제점」, 「산학연 협동 체계 구축 방안」 등의 정책 세미나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및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25]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들의 활동은 과학기술과 연관된 시민 운동에 새로운 비젼을 제시해줄 수는 없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산업 분야 종사자들이나 대덕 단지 연구원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이들 단체들을 통해 일방적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제어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반 과학기술자들의 목소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민주화의 진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단체 모두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과 연관된 제도나 정책에만 주력하고 있었고, 과학기술과 연관된 사회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두 단체 모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과학기술자가 주축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단체 모두 한번도 근대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

25) 이영희, 『과학기술과 시민단체』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8년), 46-47쪽.

과학기술이 생산력으로서 중립적이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비판은 과학기술의 효율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비민주적이고 비효율적인 정부의 의사 결정구조에만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96년에 있었던 '과기특별법' 제정에 관한 토론에서 국민 대중의 참여 제도화라든가 공공 복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의지 결여 등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이런 한계로부터 연유하고 있었던 것이다.[26] 이런 제한적인 활동도 90년대 말이 되면서, 자체 조직의 와해가 오면서 중단되고 만다. 이념적으로 단체 구성원들을 묶어둘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도 조직 와해의 이유였을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정보 통신 기술 분야에서 대안 과학기술 운동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공개 소프트웨어 운동을 펼친 엠팔 그룹의 운동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1987년 한국 데이터 통신에서 한글 전자 사서함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정보 통신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정보화 사회를 생각하는 사랑방' 이 결성되었고, 이 단체의 후속 그룹으로 엠팔이 탄생했다. 엠팔은 우리나라 최초로 공개 소프트웨어 개념에 바탕하여 한글 통신용 소프트웨어인 "엠팔의 반란"을 제작, 공개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후 정보 공유 운동, 한국 전기 통신 공사의 낙전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의 활동을 벌이다가 91년 12월 재정난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이들의 공개 소프트웨어 운동은 자본주의의 질서에 대항하는 일종의 대안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기 통신 공사에 대항하는 운동은 소비자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엠팔 그룹의 정보 공유 운동을 더욱 급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던 그룹이 1995년 서울대학교 동아리 형태로 결성된 SING(SNU Information Networking Group)이다. 미국 등에서 주창되기 시작한 카피레프트 운동을 국내에서 실천하고자 한 SING은 정보의 상품화 반대와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강령으로 내세웠다. 1) 정보 상품화의 법적 근거이며, 기실 다국적 기업의 이익만을 대표할 뿐인 지적 재산권의 철폐, 2) 공적인 정보의 완전 공개와 사적인 정보의 절대적 보장, 3) 정보 및 정보 기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지적 재산권 철폐 운동의 일환으로 '정보 생산자 네트워크의 철학적 표현'인 카피레프트 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초기 사회의 급진적인 변혁을 지향하던 이 운동은 운동을 주도하던 이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정보연대 SING으로 개편되었고, 운동 내용도 변화하게 되었다. 정보 연대 SING은 민주 노총 홈페이지 제작, 전자 주민 카드 저지 운동 등의 정보

26) 한재각, 「장외의 여섯 번째 토론이 필요하다-한과청 과학기술특별법 포럼에 다녀와서」, 『공대저널』 1996년 9월 17일, 5면.

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GIF 포맷 사용 반대 운동과 같은 GNU/FSF 주도의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 동참하였다. 현재는 활동이 중지된 상태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기술 개발이 용이하다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특성에서 연유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대안 과학기술 운동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두 단체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초고속망의 구축, 이들 기술자들의 양적인 증가라는 객관적인 상황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이들 운동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 요인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과학기술을 매개로 시민 사회의 문제들이 사회적인 쟁점이 된 것도 90년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전자주민카드 논쟁과 NEIS 논쟁의 예에서처럼 정보 기술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정보 인권 문제가 주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였다. 환경오염과 같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과학기술의 폐해뿐만 아니라, 정부나 기업의 감시 체제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는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도구적 기술관에 한 번도 비판을 받아보지 못한 정부 관료들의 정보 기술 이용 계획은 시민단체들에 '빅 브라더' 공포감을 확산시키기에 충분하였던 것이다. 95년 정부의 통합 전자주민카드 계획 발표가 있은 후, 96년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각종 토론회와 반대 여론 형성에 주력한 이들의 노력으로 이 계획이 폐지되기는 하였다. 하지만, 이 운동으로 시민들의 정보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높아지지는 않았다. 정보 인권 문제는 바로 한국 시민 사회의 허약함을 노출해주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1998년 11월, 진보 네트워크 센터가 창립되었다. 검열반대와 표현의 자유 운동, 감시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확립, 지적 재산권의 공정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경계하고 정보 공유권을 확장하기 위한 활동 등 정보화 시대에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NEIS 반대 운동, 전국 정보 운동포럼, 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활동, 프라이버시 보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새로운 시민 연대의 출현은 과학기술과 연관되어 시민 사회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의 표현이다.

2. 과학기술의 민주화-시민 과학을 향하여

과학기술 정책에의 일선 과학기술자의 참여라든가, 새로운 시민 운동의 주제로서 과학기술 문제의 대두는 앞서 정리하였듯이 90년대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었다. 그

러나 우리 사회에서 과학기술과 연관된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시민 운동의 형태로 과학기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로 제기된 "과학기술의 민주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11월에 창립된 참여연대 산하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에 의해 촉발된 이 논의는 이전의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와 분명한 획을 긋고 있다.

서구에서 진행되어 온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 이론-과학사회학, 과학사, 과학철학-등에 근거하여 '과민모'는 자신들 활동의 목적을 과학기술에서의 실질적인 참여 민주주의 확보로 두었다. 이들에 따르면, 과학기술은 이전의 가치 중립적인 생산력이 아니라, 사회 여러 행위자들간의 이해들이 얽혀 빚어지는 사회적 산물이다. 또한 과학기술 전문지식은 사회문화적으로 국지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다른 지식과 달리 특별한 객관적인 지위가 주워질 이유가 없다. 그간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해왔던 전문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적 한계와 사회적 제약을 지니고 있고, 사회 정치적 이해 관계에 의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전문지식의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정책 등이 이들 전문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들에만 맡겨지고, 시민들로부터 격리되므로써 과학기술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과학기술에 대한 의사결정에 시민의 참여 기회가 박탈되면 복지, 환경, 안전, 윤리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민의 가치관과 이해는 반영되지 못하고, 이윤과 군사력에 봉사하는 과학기술이 기존 사회구조에 의해 확대재생산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과학기술에서의 참여 민주주의 확보는 정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여 잘못된 과학기술 투자로 인한 엄청난 환경적 비용 및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한다"[27] 즉, 정부, 기업 및 과학기술 엘리트에 의해서 독점된 과학기술 정책 결정, 집행 및 평가에 시민 참여를 높임으로써, 인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시민 참여를 통해 '기술적 시민권'을 확보해가는 것이 "과학기술의 민주화"의 내용으로 정의하였다.

이전 과학기술에 관한 논의들이 과학기술의 중립성에 근거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직접 담당하는 과학기술자와 일반 대중간의 엄격한 분리를 전제하고 있었다면, '과학기술 민주화' 논의에서는 이런 구분이 사라져버렸다.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 내용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었다. 나아가 과학기술 민주화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대안 과학정책이나 지식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었다. 전문가 지식과 대등한 지위를 갖는 시민 지식은 기존의 과학정책이나 지식과 구분되는 대안 지식, 정책

27) 김환석, 「과학기술의 민주화란 무엇인가」 과민모편, 『진보의 패러독스』 (당대 1999), 15쪽.

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기술 민주화 논의는 상당히 급진적인 것이었다.[28]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급진성은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못하고 있다.

발족 당시 '과민모'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시민 참여▶기술영향평가제도▶신기술협약 추진과 과학기술 정책의 감시를 계획하였다. 즉, 공공정책에의 시민 참여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과민모에서는 여러 시민 참여 제도 중에서도 '합의회의' 추진에중점을 두었다. 이 계획은 운좋게도 98년도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의 사업으로 채택되어, '시민 참여 실험'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98년 11월에 열린 '유전자 조작 식품 합의회의'는 과민모 활동가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 어떤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29] 99년에 열린 '생명복제 기술 합의회의'를 거치면서, 시민 참여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전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2000년 제도 연구 위원회에서 행한 시민 참여 모델에 관한 연구 발표회에서는 합의회의를 제외한 다른 참여 제도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과민모에서 시민과학센터로 개칭을 하고, 초기 공공 정책에의 시민 참여 활성화에 집중하였던 활동을 확대하였다. 과학기술 위험성 규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논쟁이나 연구 개발 투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한 시민 참여 촉진, 생명공학 기술의 오남용 에 대한 시민 사회 감시 활동 강화 등을 센터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정책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 관한 사회적 논쟁에까지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그간 이루어진 실질적인 사업들의 내용에서는 이와같은 시민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할지, 그리고 시민 사회의 감시 활동에서 시민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보이지 않는다. 가장 활발한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은 각종 법제정에 관한 공청회, 토론회인데, 이는 앞서 제도 연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게다가 공청회나 토론회의 형식, 여기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이전 과학기술 관련 단체들과 별다른 차이점을 보여주지 않는다.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기술영향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

28) 홍성욱, 『생산력과 문화로서의 과학기술』(창비사 1999), 147쪽.

29) 합의회의의 진행과정, 그 과정에서 대두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김환석, 「시민참여를 실험하다-유전자 조작식품합의회의 체험기」, 과민모편, 『진보의 패러독스』(당대 1999), 289-321쪽.

말하는 것은 또한 아니다. 그간 활동을 통해서는 이론의 근거로 내세운 '시민지식'이 과학기술정책이나 과학기술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가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다루어지는 과학기술의 내용도 대부분 생명공학과 연관된 내용으로 한정되어,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출발한 센터의 위상으로부터도 멀어져 있는 듯 하다. 시민 참여를 통해 대안 과학정책을 마련한다는 궁극적인 과제로부터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인다.

내용적으로 목적하는 바를 잘 좇아가지 못하고 있는 외에도 사회적 담론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민주화 논의가 시민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운동을 하는 단체들 내에서 아직 이 논의는 제대로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하다. 시민 단체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과거 70년대 80년대에 머물러 있거나, 설사 논의를 접했다고 해도 아주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반 시민의 참여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들 시민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 민주화 논의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맺는말

과학기술 민주화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과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 관계들이 얽혀서 빚어내는 산물이라면, 바람직한 과학기술은 이들 이해 관계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정당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회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지난 시기의 산물인 강고한 전문가 집단의 권위에 지배당하고 있다. 이 속에서 과학기술 발전 논의는 이들 전문가 집단의 배타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소수의 이해 만을 반영하고 있다. 과학 기술 민주화 논의는 이런 배타적인 구조를 파괴하고, 과학기술을 시민의 손에 돌려 놓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 과학 센터의 활동에서 보여지듯이 과학기술 민주화는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다. 서구 시민 사회와 달리 자율적인 시민 사회 경험이 일천한 우리의 경우는 이 일은 더욱 쉽지가 않다. 우선 우리 사회 시민은 과학기술 민주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 새로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창조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의 개발뿐만 아니라, 실제 시민들에 의해 대안 정책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조그만 사례라도 이런 가능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민과학」의 시민 과학자 사례 보고가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지금까지 활동들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